



# 한국외교 60년

# 제4장

경제·통상외교

제1절 다자 및 지역 경제협력 | 225

제2절 국제 환경협력 | 234

제3절 경제협력 기반 구축 및 확대 | 244

제4절 에너지협력 외교 | 250

제5절 통상 증진 협력 | 251

## 제4장 경제·통상외교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경제외교의 최대 목표는 선진 우방국의 원조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60년대에는 자립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함께 경제외교 초점이 선진 기술의 획득과 경제협력 등에 맞춰졌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외교 활동의 범위와 폭을 넓혀 왔다.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 등 지역 경제협력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하여 한국의 경제·사회제도 등 제반 분야의 선진화와 함께 경제의 범세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0년대 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및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등 다자무역체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한국의 대외 통상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외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주의와 병행하여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까지만 해도 WTO 회원국 가운데 몽골과 더불어 전세계에서 FTA를 한 건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였던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FTA 선도국으로 부상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미 타결한 FTA는 조기에 발효시키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도 가능한 조속히 마무리하여 한국 기업들이 FTA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 및 중국과의 FTA 추진 문제를 비롯하여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 제1절 다자 및 지역 경제협력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

#### 가. 한국과 OECD

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존중을 3대 기본 가치로 삼아 상호 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세계 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61년에 수립된 정부 간 정책 연구·협력 기구이다. 회원국들의 경험에 기반을 둔 선진 정책을 논의하고 회원국들의 모범사례를 분석하여 규범화 작업을 진행하는 기구인 OECD는 금융, 무역, 환경, 사회복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질서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1996년 한국은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선진 경제의 제도와 경험을 습득하여 국내 사회·경제 전반의 선진화를 촉진시켜 왔다. 또한 환경, 노동, 경쟁정책, 국제투자, 규제개혁, 전자상거래 등 각종 국제 주요 현안 관련 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에서의 우리의 기여를 확대해 오고 있다.

#### 나. OECD 각료이사회 및 포럼 참석

OECD는 전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

(MCM: Ministerial Council Meeting)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경제 및 회원국 경제의 주요 동향을 진단하고 OECD의 지난 활동 실적 평가 및 향후 활동 방향 결정 등 OECD의 정책적 도전과 대응 과제, 향후 비전 제시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MCM에서는 코뮈니케(communique),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 및 성명서(declaration) 채택 등을 통해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한국은 1997년 MCM에 최초로 참석한 이래, 아시아 금융위기 사태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국제금융체제 보완, 개도국들의 세계 경제 편입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 논의, 세계화 논의(다자무역체제 확대에 따른 세계화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 모색), 지속가능 발전 전략 추진, 성장과 개발을 위한 공동협력,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등 매년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2009년 한국은 MCM 의장국을 수임하여 국제 금융위기 대응 및 극복 과정에서 건설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MCM 결과문서로 글로벌 경제이슈에 대한 대응을 담은 각료성명서와 녹색성장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여 세계 현안에 대한 OECD의 역할 제고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OECD는 2000년부터 MCM 과 병행하여 OECD 포럼을 개최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계, 학계,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의 참여 도모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 포럼을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소개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다. 주요 현안의 규범 형성 논의 참여

#### (1)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세계적인 무역 투자 증가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강력한 투자 보호 및 효과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핵심요소로 하는 ‘다자 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제정 논의가 1995년부터 진행되었으나, 국가의 정책 주권 침해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동 협정 제정 논의는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 내 다국적 기업의 모범적 경영 기준을 권고하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1976년 제정)’을 1999년부터 재검토하여 다국적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개정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뇌물 방지, 소비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국적 기업의 제반활동이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근로자·소비자의 권리 보장 및 부패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한국은 개정 가이드라인이 국내 투자 유치 활동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고,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으며,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국내 근로자,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동 개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2) OECD 뇌물방지협약

OECD에서는 국제상거래 시 뇌물공여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궁극적으로 국제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뇌물방지 논의를 시작하였다. 1994년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억제하는 최초의 국제규범인 ‘국제상거래 시 뇌물방지 권고’를 채택하고, 1997년에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동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형사법 체계와 협약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1999년 1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상거래 시 뇌물을 근절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다.

뇌물방지협약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심사제도와 동료압력(peer pressure)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 중 지정된 중심사국 2개국과 사무국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심사 대상 국가를 심사하고, 여타 회원국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개선을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회원국 간 동료압력이 작용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1999년 제1단계 심사를 완료하고, 2004년 6월 이행법 및 협약의 실제 적용 실태를 조사하는 2단계 심사를 받았으며, 2단계 심사의 후속조치로 2005년 12월 구두보고를 실시하고, 2007년 1월 서면보고를 실시하였다. 한국은 동 협약의 대국민 홍보, 인지도 제고 및 협약 위반사례 적발 등에서 OECD 회원국 중 협약이행에 적극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 (3) 기업지배구조 원칙 제정

OECD는 국가별로 상이한 기업지배구조가 국제투자와 무역 증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1998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1999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확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OECD의 상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시 동 원칙을 반영하는 한편, 1999년 3월에는 OECD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OECD는 2002년부터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05년 ‘개정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채택하였으며, 같은 해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도 채택하였다.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공기업과 관련된 정부 기능을 소유권 기능과 규제·산업 정책 기능으로 분리하고, 소액 주주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보장,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8년을 전후하여 국부펀드(SWF: Sovereign Wealth Fund)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OECD 기업지배구조 조정그룹에서는 SWF 지배구조 및 SWF에의 기존 기업지배구조 원칙 적용 가능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 (4) 전자상거래 규범화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상거래 방식으로 등장한 전자상거래의 규범화를 위해 OECD는 1997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민간부문이 전자상거래의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가 함께 논의하였다.

1998년 캐나다 오타와(Ottawa)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보통신 장관회의가 개최된 이후 10년 만인 2008년 6월 17-18일간, 서울에서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참석 각료들은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인터넷 활동 전반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미래 인터넷 경제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 원칙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OECD는 고위급 및 전문가 회의, 위원회 및 전자상거래 포럼 등을 통해 사용자와 소비자를 위한 신뢰 구축, 디지털 시장질서의 기본규칙 정립 등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으며, 한국도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동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5) 유해조세관행 규제

세계화와 더불어 자본·금융시장의 자유화가 확대되면서 각국이 외국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 특혜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의 재정수입 기반을 잠식하고 국제적 자본이동을 왜곡할 수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1996년부터 OECD는 유해한 조세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후 2000년 OECD 이사회는 조세 피난처 명단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각국의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유해조세관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9년 4월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OECD의 ‘조세정보제공 비협조지역 명단’을 주목(take note)하고 OECD가 직후 명단을 공개하였다. 그 결과, 다수 국가가 OECD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유보를 철회하고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에 나서는 등 OECD의 활동은 유해 조세관행 규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6) 신조선협정 협상

조선 산업은 주문생산방식으로 생산되어 동종 상품이 없고, 세계가 완전 단일 시장이라는 특징이 있어 WTO 상품무역 규범상의 반덤핑, 상계관세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OECD는 조선 산업의 공정한 경쟁조건 조성을 위하여 1994년 OECD 조선협정을 체결했으나, 발효에 실패하였다.

이후 2002년 9월부터 OECD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 주요 조선국을 포함해 28개국이 참여하는 특별협상그룹을 구성하여 ‘신조선협정’ 협상을 추진하였다. 우리 정부는 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하에 동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조선업계의 지속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세계 조선시장 내 규범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러나 가격 관행 규율 및 보조금 규제 강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여 2005년 9월 이래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2008년 이후 OECD 조선작업반에서 신조선협정의 협상 재개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조선업계 1위 국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전세계적 조선 공급능력 과잉 문제 및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에 기여하고 세계 조선업계의 공정한 경쟁조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라. 한국인의 OECD 사무국 진출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 이래 우리 국민의 OECD 사무국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지난 2007년 OECD 사무국 채용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OECD 활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OECD 사무국에 한국 직원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총 28명의 직원을 파견하였다.

아울러 OECD 전문가 양성 및 선진 경제 포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OECD 채용설명회 및 관련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한국 국민의 OECD 사무국 진출을 계속 장려해 나갈 예정이다.

## 2. G8·G20 정상회의 및 국제 금융기구 참여

### 가. G8 확대정상회의 참석

G8 정상회의는 주요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공론의 장이다. G8 정상회의는 1973년 조지 슈츠(George P. Schultz) 미국 재무장관의 제의로 개최된 G5(미, 프, 영, 독, 일) 재무장관 회의가 그 모태로,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붕괴와 1차 석유파동 등 1970년대 세계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다. 이후 동 회의는 프랑스와 독일의 주장으로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었으며, 1975년 이탈리아, 1976년 캐나다가 참여하여 G7 정상회의로 확대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1998년에는 러시아가 정식회원이 됨으로써 현재의 G8 체제를 완성하였다.

2008년 7월 9일 일본 도야코(Toyako)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는 G8 국가 이외에 한국,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 및 아프리카 7개국 등 총 14개 초청국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아프리카 개발문제, 세계 경제문제와 비확산 문제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도야코 G8 정상회의는 한국이 최초로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고유가 등 세계경제의 긴급한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등 값진 성과를 얻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도야코 G8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추진 등을 발표하여 기후변화 문제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에 부각시켰다. 특히 세계 경제의 가장 긴급한 현안인 고유가 대응 논의에서는 선도 발언을 통하여, ‘서울시 버스 전용차로제’를 에너지 수요의 합리적 감축 모범사례로 소개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도야코 G8 정상회의를 계기로 G8,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통해 한국 정상외교의 폭을 높였다. 특히 미국, 러시아 등 6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이들 국가와의 관계 강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쳤다.

### 나. G20 정상회의 참여 및 기여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 금융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6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이하 G20 재무장관 회의)’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G20 재무장관 회의는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신장한 신흥경제국과 금융 협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참가국은 G7·G8 참가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및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남아공, 사우디, 터키, EU 의장국(순번제) 등 20개국이다. 1999년 이래 매년 한 차례의 G20 재무장관 회의와 두 차례의 재무차관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한편, 2008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선진국 금융위기의 여파가 신흥개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침체가 가시화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 정책공조와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금융 시스템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정상급 국제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마침내 2008년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기본 입장에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정상외교 및 재외공관 네트워크와

주한 대사관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장으로 기존의 G20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정통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방안을 선진국들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G20 정상회의가 출범하는 데 중요한 산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1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동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경기부양,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장벽의 동결(standstill),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협력 등을 적극 제안하였으며, 한국의 제안이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얻고 정상선언문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신흥경제국의 지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 회원국 확대와 주요 선진국의 신흥경제국과의 통화스왑 확대 등 신흥경제국의 금융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 한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다. 특히 2009년 G20 의장단(브라질, 영국, 한국)이 워싱턴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조율하도록 결정되어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체제 개선 논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4월 2일 개최된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G20 의장단으로서 의제설정 과정부터 적극 참여하여 세계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 공조 및 보호주의 저지 의제 부각, 부실자산 처리 원칙 수립, 국제금융기구 재원 필요성 강조 등 세계 경제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2009년 9월 개최된 피츠버그 제3차 G20 정상회의는 그간 G20 정상회의가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을 평가하며, G20을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 지정하고, 2011년부터 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여 G20 제도화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되었는데, 이는 그간 우리나라가

G20 의장단으로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다. 국제 금융기구 참여 확대

신흥경제국의 대표격인 한국은 향후 국제 금융감독체제 개선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에서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FSB는 국제 금융안정 도모, 금융기관 거래의 지도·감독 협조, 국가 및 국제 감독기구, 국제 금융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2009년 4월 2일 G20 런던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직을 강화·확대하여 현재 G7 국가 및 네덜란드,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호주, 한국, 브릭스(BRICs), 멕시코, 사우디, 터키, 남아공,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스페인 등 24개국과 IMF, 바젤은행 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OECD, EU Commission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 제2절 국제 환경협력

### 1. 저탄소 녹색성장 국제협력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범세계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기후변화는 이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의 생산과 사용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에너지자원의 고갈로 인한 에너지안보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의 97%를 수입하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한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임으로써 장기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가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로 기존의 요소 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9일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된 G8 기후변화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인류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녹색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를 소개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마련 중임을 소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얼리무버(early mover)’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사회를 저탄소 사회로 조기에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산업구조를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저탄소 구조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이는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을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자 향후 60년을 위한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한국은

‘녹색뉴딜(Green New Deal)’ 등 선도적인 정책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녹색성장 논의를 주도해 오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개도국, 특히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야코 G8 기후변화 확대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이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2008-2012년간 2억 달러를 기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저탄소 정책협의 및 기술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는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의 출범을 천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동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2009년 5월 29일 서울에서 ASEAN 10개국과 중국, 몽골은 물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고위대표와 유엔 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 국제기구 대표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관한 정부 간 정책대화인 ‘동아시아 기후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채택 필요성과 EACP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와 공동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기후 포럼을 통한 정책 방안 공동 모색 지속 추진 등을 선언하는 ‘동아시아 저탄소 녹색성장 서울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2009년 6월 1일과 2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ASEAN 10개국 정상들에게 ‘한·아세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문서’를 제시하였다. 동 문서는 녹색성장 개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협력,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패턴 변화, 사회간접자본 구축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EACP, 동아시아 기후포럼 등의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 범지구적 다자 간 환경협력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해양오염 등 지구환경 문제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고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을 끼치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차원의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국제사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지구정상회의 혹은 리오회의),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 발전 세계정상회의를 통해 세계화 속에서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위생 보건 등의 사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약 160여 개의 다자 간 환경협약(MEAs: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을 채택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생태계, 대기, 화학 등의 분야에서 약 60여 개의 MEA에 가입하여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 가. 기후변화 대응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1992년 5월 채택되고 1994년 3월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3년 12월 47번째로 유엔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원가입국이 되었다. 이후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기후변화협약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동 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해 2008-2012년間に 온실가스를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 우리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진행 중이던 동 의정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양해를 얻었다. 또한 1997년 동 의정서 채택 시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였다.

한편,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제1차 공약 기간(2008-2012년) 이후인 2013년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체제를 논의하는 포스트(Post)-2012 유엔 기후변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Post-2012 기후 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로드맵과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 이는 향후 2년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개시되었으며,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제15차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의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Post-2012 기후 체제 협상의 최대 쟁점은 미국과 주요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이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 2위를 다투면서도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주요 개도국 역시 교토의정서상 감축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국가의 명단인 부속서 I(Annex I)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자 OECD 회원국이며 에너지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볼 때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Post-2012 기후 체제에서는 한국도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도야코 G8 기후변화 확대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없으나, 국민적 합의를 모아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를 설정하여 2009년 중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자발적으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선도적인 감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도 한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등록부 설치와 개도국 감축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탄소크레딧(carbon credit)을 제공하는 방안 등 건설적 제안들을 제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협상 결과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나. 생태계 분야

한국은 생태계 분야에서 ‘생물다양성협약(1994년 10월 가입)’,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1993년 7월 가입)’,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1997년 3월 가입)’ 등에 가입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Cartagena on Biosafety Protocol)’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시 수입국의 사전 동의를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출국의 반대로 오랜 논의 끝에 2003년 9월 11일 채택되었다. 한국은 2007년 10월 가입하였으며, 동 의정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세계 약 140여 개국 2,300여 명의 정부 및 NGO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본 총회는 협약 사무국 및 참석자들로부터 내용, 조직 및 시설 면에서도 역대 회의보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리 정부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창원선언문’을 채택하여 환경 선진국가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 다. 유해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1990년대부터 UNEP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유해 화학물질 및 살충제의 피해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전개되었다. 한국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1994년 2월 가입)’,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2007년 1월 가입)’,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 교역 시 사전통보 승인에 관한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s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2003년 8월 가입)’에 가입하여 화학 및 폐기물 분야 국제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 라. 사막화 방지

국제공동체는 1968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주변의 사바나 대초원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사막화가 초래하는 기근과 가난, 질병과 사망 및 생태계 황폐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정부 간 교섭위원회 회의를 통해 완성된 ‘사막화 방지 협약’ 안이 1994년 6월 17일 파리에서 채택되어 1996년 12월 26일 발효되었다. 사막화 방지협약에는 2007년 5월 기준 191개국 이상이 가입한 상태이며, 우리 정부는 1994년에 서명하고 1999년 8월 17일에 비준하여 동년 11월 15일부터 발효하였다. 한국과 많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중국과 몽골은 각각 1994년 서명 및 1996년과 1997년에 비준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3년 12월 29일에 비준하여 2004년 4월 28일부터 발효하였다.

사막화 방지협약은 당사국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사막화 지역 피해국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사막화 방지협약의 채택부터 2007년 제8차 당사국 총회에 이르기까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가 동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

한편, 중국과 몽골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막화는 동북아 지역의 강한 편서풍 기류와 결합하여 황사 발생빈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 몽골 등 사막화 피해 당사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인근 지역 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한·중, 한·몽골, 한·중·일 및 한·중·일·몽골 간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사막화 방지 수종 개발 및 목초지 조성 기술을 위한 공동연구, 황사 발생 모니터링, 조림기술 전수 및 조림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 방지와 환경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마. 지구환경기금(GEF)

한국은 앞에서 언급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오존층, 사막화 방지, 유해 화학물질·폐기물 등에 대한 개도국의 환경문제 대응 촉진을 위해 1991년 발족된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에 1994년부터 참가하여 왔다. 또한 2006-2009년간 600만 달러를 GEF에 제공하여 개도국의 환경보호 및 환경 관련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 3. 동북아 환경협력 체제 강화

동북아 환경협력은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 간에 황사, 산성비 등 월경성 오염문제와 황해·동해에서의 해양오염문제, 생태계 보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 동북아 지역은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발전 차이와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협력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동북아 국가들은 1992년 UNCED 이후 지역 차원의 환경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협력체를 발전시켜 왔다. 동북아 환경협력은 다자와 양자협력 방식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협력의 수준은 정부 간, 환경당국 간, 연구기관 간, 프로젝트별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먼저 다자 환경협력체인 동북아 환경협력 계획(NEASPEC: North 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의 참여로 1993년 출범하였다. 2009년 4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4차 NEASPEC 고위급회의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효율 파트너십(Eco-Efficiency Partnership)’이 채택되어, 한국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도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월경성 대기오염 저감, 생태계 보전 등에 중점을 둔 정책대화 및 협력사업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역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 ‘북서태평양야생물보전실천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을 설립하여 매년 정부 간 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활동센터의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2008년 10월 제주도에서 제13차 NOWPAP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되어 유류 및 유독물질의 해상유출 시 긴급 대응 계획을 채택하는 등 새로운 협력사업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04년 NOWPAP 공동 사무소를 부산 국립수산

과학원에 유치하여 일본 토야마 사무소와 함께 운영하고 있어, 북서태평양 보전을 위한 참여국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는 1999년 이래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로 황사 저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교류, 공동 환경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는 1993년 전문가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되어 1998년부터 정부 간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는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 11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양자 차원의 환경협력을 위해 1993년 일본 및 중국과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양국 교대로 환경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협력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2008년 6월 제11차 한·일 환경공동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 황사 대응, 해양 쓰레기 문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공동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중 환경공동위원회는 2008년까지 총 13차례 개최되었으며 황사 대응, 황해 보전, 환경기술 공동연구 및 환경산업 등의 분야에서 12개의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1994년 ‘한·러 환경협력협정’ 체결 후 2007년까지 총 네 차례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환경정책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철새 보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 내 환경협력은 역내 국가 간 정치이념과 경제발전의 차이로 인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경협력이 제도화되고 법규범을 갖는 단계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급 차원에서 진행되는 환경협력 활동의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제3절 경제협력 기반 구축 및 확대

### 1. 원자력협력

원자력은 세계 전력 공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의학, 과학,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으로 인해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 및 물질의 국가 간 이전, 재처리 및 농축 등이 국제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핵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전체 전력 공급의 약 36%를 차지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국제적 기반 강화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20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 세계 6위의 원전 운영국이며, 한국 표준형 원자로 개발 등 그 기술 수준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5월 현재,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벨기에, 아르헨티나, 베트남, 터키, 브라질, 체코, 우크라이나, 이집트, 칠레, 루마니아, 요르단(2009년 5월 발효), 카자흐스탄(미발효) 등 23개국과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2009년 하반기에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및 ‘한·일 원자력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칠레,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11개 국가와는 양국 정부 간 원자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공동 연구 수행 및 기술 개발, 정보 교환, 인력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외 관련 정책적인 사항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요르단을 비롯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터키 등

아중동 국가와 인도, 방글라데시, 폴란드 등 국가에 대한 원전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 또는 검토 중에 있다.

## 2. 항공협력

1948년 대한국민 항공사(KNA: Korean National Airlines) 설립으로 시작된 한국의 민간항공은 1952년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에 가입하였다. 이후 1957년 4월 최초로 미국과 버뮤다 체제에 입각한 양자 간 항공협정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국제 항공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였다. 국적 항공사로서는 1969년 3월 대한항공(KAL: Korean Air Lines)이 설립된 이래 1988년 아시아나항공사(Asiana Airlines)의 설립으로 복수 항공사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2009년 현재 40개국 127개 도시에 취항 중에 있다.

우리 정부는 항공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1998년 4월 미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 이래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17개국과 여객 부문 항공자유화에 합의하였으며, EU, 러시아 등과의 항공자유화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2009년 현재 88개국과 양자 간 항공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항공 시장 및 항공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양자 간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기존 협정을 적절히 개정해 나가고 있다.

## 3.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추진

우리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할 경우 체약 당사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시에는 계약 당사국들은 과세권을 조정하여 해외 투자 등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게 된다. 2009년 6월 현재 한국은 90개 국가(시행국 83개국, 서명 7개국)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79개 국가(시행국 73개국, 서명 6개국)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향후 한국과의 투자 교류 증대가 예상되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 4.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목적 및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상대국으로 단기간(주로 5년 이내) 파견된 자국 근로자에 대한 상대국 연금 보험료가 면제됨에 따라, 한국 근로자 및 기업의 상대국 진출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둘째, 한 국가의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연금 가입 기간 조건 충족을 위해 양국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대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 및 자영자의 복지혜택이 크게 증가된다.

우리 정부 1993년 미국이 정식 협상 개시를 요청한 이후 우리 근로자가 많이 파견되어 있는 북미 및 서유럽 국가들과의 협정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2009년 7월 1일 발효 예정)와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후 아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과도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일본,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호주, 헝가리, 체코와의 협정이 발효 중이며,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와의 협정도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나머지 서유럽 국가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국가와의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 5. 해운협력

정부는 1956년 미국과 ‘우호통상 항해조약’을 체결한 이래 2009년 5월 현재 중국, 영국, 노르웨이 등 총 19개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와는 1983년 협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측 사정으로 장기간 논의가 중단되었으나 2006년 7월(2006년 2월 협상 시작, 2009년 8월 체결)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해운협정 논의가 재개되어 해운기업의 범위, 연안 해운 관련사항 등 협정문안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지중해-흑해’ 항로 개설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및 수에즈 운하에 대한 한국 선사의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해 터키·이집트·튀니지와 해운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해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송하고 한국 선사가 중동으로 진출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6. 수산협력

세계 10위의 수산물 생산국이자 세계 3위의 원양어업국인 한국은 기존의 양자 간 어업협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필요한 어업쿼터를 확보하고 새로운 어장 개척을 위한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요 연안국과 공동 어로, 합작 투자 등을 통한 어업의 현지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양자 차원에서 일본을 포함한 러시아, 프랑스, 파푸아뉴기니 등 13개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러시아, 일본, 프랑스와는 정부 간 어업 공동위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페루 등과는 협정 체결을 교섭 중에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및 ‘유엔 공해어업협정(UNFSA: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등의 채택으로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어업 규제가 강화되고 지역 수산기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수산기구에 참여하지 않고는 공해조업이 곤란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어업 질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한국 원양어업의 지속적·안정적 조업 보장과 책임 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 수산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미가입 국제기구의 참여와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15위의 수산물 생산국인 한국은 2008년 3월 UNFSA를 국내 발효하여 지역 수산기구를 통한 국제적 어업협력에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식량 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수산위원회, 국제 포경 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인도양 참치위원회(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ICCAT: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등 16개 국제 수산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참치 어획량 90% 이상을 어획하고 있는 중서부 태평양 지역 수산관리기구인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2004년 6월 설립) 활동에 적극 참가해, 보존관리 조치, 쿼터 배정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 또한 신설 또는 미가입된 국제 수산기구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과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채택된 국제어업 규범의 이행을 위해 국내적으로 어업 관련 법규 정비 및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7. 과학기술 및 우주기술협력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인 과학기술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는 2002년 이후 5년마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2008년 제2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08년 12월)을 수립하여 자원·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유럽입자물리연구소,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등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형 국제 공동연구 사업 참여를 확대해 첨단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OECD, APEC 등 다자 간 과학기술정책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중장기적으로 첨단 과학기술 주도국가로의 진입 추진 및 글로벌 과학기술 지배 구조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첨단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선진기술 도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반면, 각국의 기술 보호주의 강화로 기술 도입의 대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기술의 원활한 도입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협력력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기술 도입의 원활화와 기술협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인도, 남아공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과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협력의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전통적인 기술 강국과의 지속적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진국과의 양자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였으며, 헝가리, 체코 등 원천기술 강국과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초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증진하였다.

한편, 미래산업인 우주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기술 강국인 러시아와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2004년)’ 및 ‘한·러 우주기술 보호협력협정(2006년)’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들을 바탕으로 위성 개발에 관한 협력사업을 수행하여 양국 간 기술협력으로 만든 소형위성발사체(KSLV-1)가 완성되어 금년 중 발사

예정이다. 또한 우주기술 선진국인 미국과의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양국 기관은 우주 분야 협력의향서에 서명하였으며 ‘국제 달 탐사 네트워크’ 참여 등 실질 분야에서의 우주기술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주 강국과의 협력 증진 및 신규 국제 기술협력 사업 확대를 통해 우주기술 강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 제4절 에너지협력 외교

한국은 2008년 기준 세계 11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10위의 석유 소비국이지만, 1차 에너지의 대부분(97%)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의 약 80%는 중동산으로 에너지 수입원의 지역적 편중도 심해 취약한 에너지안보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에너지 도입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과거 개발자원의 단순한 도입 단계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자원 탐사 및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토록 유도하여, 주요 자원 보유국으로부터 우리 기업이 개발하는 에너지자원을 직접 도입하는 형태의 자원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중동 국가 위주의 에너지 도입으로부터 중앙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도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 부국과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에너지 확보 차원의 접근방식을 탈피한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협력 외교를 펼쳤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활동을 돕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 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 정도 및 기술 수요 등이 고려된 호혜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에너지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공동 노력을 경주하고, 주요 에너지 소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은 국제 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PEC 에너지 실무그룹(EWG: Energy Working Group), ASEAN+3(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 등에서의 에너지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또한 2009년 1월 합의된 국제재생 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설립 규정에 서명하여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제5절 통상 증진 협력

### 1. 통상진흥정책

#### 가. 통상진흥정책의 변화 추이

우리 정부는 광복 이후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기 시작한 1962년까지 대외 통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초기 단계였기에 선진국의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화 등으로 한국의 통상정책 운영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미미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한국은 무역 및 외자 도입에 있어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여 미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60년대는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상대적 저임금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공업화 전략이 착수됐으며, 당시의 수출 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에

따라 무역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요국과의 무역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 시기에 한국은 자유무역체제를 바탕으로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가입(1967년)하여 국제적인 다자 간 협력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 한·일 수교로 인해 일본이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등장하였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의 무상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차관 및 상업차관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외국 자본조달 창구가 다변화되었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한국과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은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으로 수출 기반을 구축하면서, 선진국에 전자·철강제품 등을 수출하고, 이들 국가에서 운반 기계 및 일반 기계, 전기 기기 등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수행으로 수출 증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지만 수입 증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널리 확산되자 통상정책도 협력보다는 경쟁 위주로 추진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있어서 투자 재원으로 도입된 차관의 최대 공여국은 미국이었고, 외국인 투자에서는 일본이 최대 투자국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점차 균형을 이루면서 주요국과의 협력적인 동반자관계가 정립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유가·저금리·저환율의 3저 현상에 힘입어 한국의 교역 규모가 증대되고, 무역수지 흑자가 누적되면서 미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통상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60-1970년대의 중상주의·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에서 탈피하여 자유무역주의 기조 속에 수입 자유화 및 개방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1990년대 들어 대외 경제협력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 각종 국제기구 가입을 계기로 한층 확대·심화되어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WTO, OECD 등 다자 간 경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익을 확보하고 국내 제도 및 관행을 국제규범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등 지역 경제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배타적 지역주의를 견제하는 동시에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부터는 금융·외환위기 특별대책반을 설치하고 전 재외공관을 활용한 적극적인 외환위기 극복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의 협의 과정에서 무역 보조금 금지,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수입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하여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2000년대에는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적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공고화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본부와 재외공관이 한국 기업의 수출지원 및 통상 환경 개선에 외교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선 정부는 전 재외공관에 설치된 '통상·투자진흥 종합지원반'의 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동 지원반은 재외공관과 업계 간 협조 채널을 구축하여 주재국에 수출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6개 시범 공관들을 통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동 서비스 제공 공관 수를 1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민·관 합동 통상사절단을 세계 주요 시장, 유망시장 및 틈새시장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동 사절단은 우리부가 파견 대상지역 및 시장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 단체와 업종별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구성하고 있다. 2008년 12월 19일 현재 150여 개국에 파견되어



있는 통상투자사절단의 파견횟수를 더욱 확대하고, 파견 지역도 기존의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0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경제 단체 및 업종별 단체와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여 협력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 개척이 어려운 농식품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농식품 세일즈 외교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농림부와도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재외공관 등과 연계하여 농식품 수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유엔 조달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유엔 조달시장설명회’를 민·관 합동으로 세 차례 개최하였고, 2009년에는 제4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정부는 재외공관이 보고한 각국의 정부 조달 및 입찰정보 등을 국내 유관부처 및 경제 단체, 기업 등에 제공하는 이메일링(E-mailing)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최근시장 정보란 및 해외입찰 정보란을 각각 개설하여 재외공관에서 보고한 각종 경제·통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전경련, 대한상의, 해건협 등 33개 경제 단체에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총 698건의 정보 메일을 제공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1년 12월부터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업서비스란’을 개설하여 한국 업체들과 재외국민들의 해외시장 관련 문의에 대해 고객지향형 1:1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외공관 경제 담당관들이 해외 건설협회 홈페이지에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 입찰 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하여 한국 기업들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008년도도의 경우 총 91개국에 대한 통상장벽 정보를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표준 인증 등 기술 장벽, 지식재산권,

\*주일(대) 바이어 초청 ‘한국 문화의 밤’ 행사 시 1,35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 정책, 금융 등 15개 분야별로 조사·분석 정리하고, 또한 국가별 통상 환경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각국 시장에 대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우선 1998년부터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통상 환경을 분석·정리한 『외국의 통상 환경』을 매년 발간하여 국내 경제 단체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56개 재외공관에서 보고한 해외진출 한국 기업들의 통상마찰 및 각종 애로사항 관련 사례 89건을 수록한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을 발간하여 해외진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한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 환경과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를 소개한 『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시장 진출가이드』를 발간하였다.

#### 나. 무역 및 투자 변화 추이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따라 한국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성공적인 경제발전은 수출 증대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1950년대 연평균 2,000만 달러, 1961년 4,00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대외 수출은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과 더불어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였다. 1964년 1억 달러, 1971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 1987년 473억 달러, 1997년 1,362억 달러(1998년에는 1997년보다 -2.8%로 감소한 1,323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여 1961년부터 1997년까지 36년 동안 무려 약 3,400배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수출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광복 이후 1950년대 초반까지 원자재 수출로 외화 재원을 확보하였던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수출 구조가 고도화되어 과거의 원자재 및 경공업 제품 위주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자동차·반도체·산업용 전자제품 등이 주종 수출품을 이루고 있다.

또한 경제 규모의 확대와 개방화 추세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부터 금융자유화와 국제화에 따라 해외 투자가 급속하게 늘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위원회,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하여 전개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투자 유치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된 국내 영업 환경에 대한 해외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2009년에는 미국, EU 등 주요 투자국들의 경기침체 본격화와 세계적 기업들의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전세계 투자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전년도 수준의 FDI 실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및 투자협정 체결 등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을 통한 국내 제도 및 영업 환경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표1〉 한국의 무역 규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무역규모	수 출	수 입
1950	38	33	5
1960	377	33	344
1970	2,819	835	1,984
1980	39,797	17,505	22,292
1990	134,860	65,016	69,844
1998	225,595	132,313	93,282
2008	857,281	422,007	435,274

〈표 2〉 직접 투자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시 기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1962-1971	14	266
1972-1979	127	1,303
1980-1989	2,822	5,498
1990-1998	25,826	26,420
1999-2008	90,362	115,485

※ 해외 투자는 실적 기준이며, 외국인 투자는 총인가 기준임.

〈표 3〉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지원

2007년 11월 27일 제142차 국제 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총회에서 여수 유치가 확정된 이후, 체계적인 여수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2008년 3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공포·시행되었으며, 4월에는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장승우)가 출범하였다.

2009년 6월 제2대 위원장으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취임하였으며, 정부대표로는 이준희 전 주스웨덴 대사가 2009년 5월 임명되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개최 준비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차장)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수조직위는 조직위정관 등 주요 사안 의결을 위해 위원 총회와 집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지원위, 위원총회, 집행위에 각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여수조직위 사무처에도 외교통상부에서 김일수 대외협력본부장 등 4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2008년 5월 여수조직위가 여수박람회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여수조직위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08년 12월 2일 제144차 BIE 총회에서 여수박람회가 BIE의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수조직위는 BIE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여수박람회 참가 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통상부는 여수조직위와 함께 2009년부터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에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고, 참가 유치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여수박람회 참가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 다. 통상외교 활동 역량의 강화

WTO가 규범에 의해 국제무역을 관리하는 중심적 기구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통상 현안을 WTO 규범의 틀 안에서 해결하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정부는 양국 간의 통상 현안은 가급적 양자협의 단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선진국들이 제기한 분쟁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통상 현안이 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주요국과 포괄적인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국내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해 왔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는 양국 간 통상장관회담 등 각료급 협의체와 기타 실무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주한 상공인들의 불만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정부 간 마찰로 비화하는 것을 예방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상외교의 전개와 보다 전략적인 통상외교 활동을 위한 방안으로 1998년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였다. 특히 정부는 시장기능과 공정경쟁을 존중하는 ‘개방된 통상 국가(open trading nation)’를 통상정책의 기본목표로 하여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동시에 한국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산업 전략과 연계한 통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제도의 개혁을 통한 원만한 통상협력 관계를 지향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2. 양자 간 통상협력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무역 규모가 커지고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통상마찰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교역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자 간 통상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교역·투자에 있어 한국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서남아,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시장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양자 통상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중국의 경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제1위의 투자 대상국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불과 12년 만인 2004년에 한국의 제1위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통상관계의 급격한 확대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현안 및 분쟁 소지도 불가피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중 양측은 양자 및 다자 간 긴밀한 협의채널 구축을 통해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양국은 무역 확대의 기초하에 점진적으로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0년 2,000억 달러, 2019년 3,0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통상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특히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수출시장 제공 및 제조업 분야 투자 진출을 통해 한국 대외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해 왔다. 우리 정부는 한·일 상호 간의 투자 촉진과 이를 통한 대일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투자 보호는 물론 투자 전의 내국민 대우, 광범위한 성과요구의 금지, 현행 외국 자본 규제에 관한 정지 등 투자자유화 내용까지 포함한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2003년 발효)하여 양국 경제관계의 진전을 가져왔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EU 제외 시 2위) 및 투자국으로 긴밀한 경제·통상관계를 맺고 있다. 앞으로 양국은 상호 기술·

인력의 교류 확대,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 등 주요 산업의 대한 투자 유치, 양국 기업 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구 4억 9천 5백만 명(2008년 기준)의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한·EU 통상관계도 양적·질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현재 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자 제1위의 대한 투자지역이며, 한국은 EU의 제8대 교역대상국으로 양측 간 통상·투자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양측은 2001년 발효된 양자 경제·통상협력협정인 ‘한·EU 기본협력협정’에 따라 매년 한·EU 공동위를 개최하여 경제 동향, 양자 간 통상 현안 및 정책,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07년 5월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면 교역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EU·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4위 교역 상대국이자 EU에 이은 제2위의 투자국이며, 한국은 미국의 제7위 교역 상대국이다. 한·미 교역 및 투자는 절대액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로도 전반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중국과의 급속한 교역 확대 및 미국 내 한국 상품 점유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입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간 경제 의존도의 상대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IMF World Economic Outlook: GDP 14조 3,340억 달러),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이 2조 5,201억 달러(美 상무부)에 달하는 거대 시장을 갖고 있어 여전히 한국에게 중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한국의 입지와 경쟁력을 회복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선진국 진입을 앞당긴다는 목표하에 2006년 2월 3일 미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여, 2007년

6월 30일 최종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한국은 새로운 세기에 대비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동남아 국가와의 경제·통상관계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ASEAN 교역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 이후 ASEAN은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 지역이 되고 있다. ASEAN에 대한 투자도 1980년대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ASEAN은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3위 투자 지역이 되었다. 한국과 ASEAN 각국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상회담, 외무, 경제 및 통상장관회담, 각종 공동위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양자 간 통상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ASEAN 각국과 한국, 중국, 일본은 ASEAN+3 정상회의를 1997년 이래 매년 개최하여 협력의 수준을 양자뿐만 아니라 지역 간 협력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날로 심화·발전하고 있다.

### 3. 다자 간 통상협력

#### 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세계무역기구(WTO)하의 다자무역체제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 간 협상은 주로 GATT 및 WTO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1948년 창설된 GATT는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통한 무역 증진에 크게 기여했는데, 한국은 GATT 가입 이후 이를 기초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잘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무역을 확대하고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1967년 3월 15일 GATT에 가입하여 GATT 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등 비차별적 권리와 6만 6,000 품목에 대한 GATT 양허세율 적용을 받게 되었다. 또한 GATT에서 주관하는 범세계적인 ‘다자 간 무역협상(MT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확대를 위한 'GATT 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GATT에 기초한 다자 간 무역체제를 강화하고 만연된 보호주의를 저지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부터 새로운 다자 간 무역협상이 추진되어 1986년 9월 20일 제8차 일반 무역협상 즉,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무역협상이 출범했다. 7년여에 걸친 UR협상(1986년 9월-1994년 4월)의 결과, 회의체 성격의 GATT 체제는 상설 국제기구로서의 WTO 체제로 발전하게 된다.

1995년에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특히 1980년대 이후 고조되기 시작한 보호무역 및 관리무역의 성향을 다시금 GATT 본연의 자유무역 정신으로 복귀시키고, 규범 중심의 공정한 교역 체제를 구축한 것이 바로 WTO 출범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GATT 시대의 일방적 수혜국에서 더 나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역질서의 구축에 앞장서서 참여하고, 세계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WTO 체제의 정착과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의 출범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한 WTO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 절차 및 무역정책 검토 등 각종 활동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한국은 WTO 체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통상 이익을 지키고,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해 왔다. WTO 출범 이후 2008년 12월까지 한국은 제소 13건, 피소 11건 등 모두 24건의 분쟁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이 중 패널이 설치된 16건의 분쟁에서 12승 4패를 기록하여 승소율 75%를 달성하고 있다.

### 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한편, 새로운 다자 간 협상, 즉 뉴 라운드(New Round) 개시문제가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 준비 과정에서 거론된 이래, WTO 4대 주요국(Quad)

통상장관회의, APEC, OECD 등 각종 고위급회의에서 뉴 라운드 출범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체제하의 최초의 다자 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DDA 협상은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반덤핑, 보조금을 비롯한 기존 WTO 규율 분야의 확대 강화와 더불어 지적재산권, 무역 원활화, 환경 등 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DDA 협상은 추가적인 시장개방 및 보조금 감축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여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그간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관세 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대립으로 당초 합의한 2004년 말 시한을 넘겨, 8년째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2002년부터 본격 시작된 DDA 협상은 2003년 상반기로 예정되었던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 접근 세부원칙(modalities)\* 합의에 실패한 후, 2003년 9월 칸쿤(Cancún) 각료회의 실패, 2004년 8월 기본골격(일명 July Framework) 합의,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의 절반의 성공, 2006년 6월 소규모 각료회의 실패, 2006년 하반기 협상 중단, 2007-2008년 중 다섯 차례에 걸친 의장 수정안 배포,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의 자유화 세부원칙 잠정 타협안 도출 등 부침을 거듭하였다.

우리 정부는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한국의 통상이익 확보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양자·다자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여러 각료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위급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등 협상 전반에서 균형 잡힌 통상 이익의 확보를 모색하였다. 또한 G20 세계 금융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에서 DDA 특별성명 채택에 기여

\* 세부원칙(modalities)이란, 농산물 및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감축공식, 보조금감축공식 등을 포함하는 양허표 작성 원칙으로, 세부원칙이 합의되면 회원국은 이에 따라 시장개방계획서(양허표)를 작성하게 된다.

하는 등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정치적 노력에도 앞장서 왔다. 이와 더불어 각 분야별 협상에서 공조 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한국의 입장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농업협상에서는 수입국 그룹 및 개도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과 서비스협상에서는 시장 자유화를 추구하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규범협상에서는 무역자유화를 훼손하는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범 강화를 주장하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한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공조 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특히 2008년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30여 개 WTO 주요 회원국 각료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산물과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에 대한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협상이 급진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잠정 타협안 도출에 기여하는 한편, 동 타협안에 한국의 핵심 이익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일부 국가 간 의견 대립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지만, 동 회의 기간 중 잠정 타협안에 대한 상당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더하여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해집단과의 협의와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각국은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을 처방하는 한편, 자국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높이거나 자국 상품 사용을 권장하는 등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경쟁적으로 취하였다. 이에 보호주의가 결국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 DDA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만을 위해 구성된 제도로서, 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급락할 때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계 주요국의 정상들은 2008년 11월 제1차 G20 세계 금융정상회의(11월 15일, 워싱턴) 및 APEC 정상회의(11월 18일, 리마)에 이어 2009년 4월 제2차 G20 세계 금융정상회의(4월 2일, 런던)에서도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보호무역 조치를 동결(standstill)시켰다. 이와 함께 무역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DDA 협상의 조기 타결이 긴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황에서 DDA 협상의 타결은 세계적인 규모의 무역 자유화 진전과 현저한 무역규모의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각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DDA 협상 타결이 세계적으로 매년 1,5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무역의 중견국가인 한국은 ‘그린룸 프로세스(Green Room Process)’\* 일원으로서 DDA 협상 출범 이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현 협상안의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핵심이익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농업, 수산업 등 한국의 취약 부문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협상 타결 시 이행 및 보완을 위한 국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4. 지역협력체 참여

### 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참여

#### (1) APEC의 출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1989년 11월 후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제1차 각료회의 개최와 함께 출범하였다.

\* 그린룸 프로세스(Green Room Process)는 주요 30여 개국의 협상 수석대표들이 모여 중요 안건을 다루는 비공식 회의로서,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의제에 대한 토론 및 결정을 위해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6개 ASEAN 회원국을 포함한 총 12개국이 참가했다.

APEC은 1993년 빌 클린턴(William J. Clinton) 미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로 격상되었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반테러가 의제에 편입되고,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재난저감 등 인간안보 분야로 의제가 확대되는 등 APEC은 역내 협력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APEC은 아·태 지역의 경제회복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초 12개국으로 출범한 APEC은 1991년 중국, 대만, 홍콩 등 3개 중화권 경제, 1993년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 1994년 칠레, 1997년 베트남, 페루, 러시아의 회원국 가입이 결정되어 21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인도, 파키스탄, 몽골, 콜롬비아, 파나마 등도 APEC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밴쿠버 APEC 정상회의는 2007년까지 신규 회원국 가입 논의를 동결(moratorium)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7년 시드니 정상회의는 2010년까지 모라토리엄을 연장하였다.

### (2) APEC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의의

APEC은 자발성과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하는 유연한 협력체이며, APEC 회원국 합의사항은 비구속적(non-binding)이다. WTO와 같이 국제조약에 기초하여 설립되어 회원국 간 합의사항을 강제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국제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한다. 개방적 지역주의란 지역공동체 설립을 추구하되 역외 국가와도 역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APEC의 유연성과 개방성은 EU, ASEAN,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등과는 구분되는 APEC의 특징이다. 이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국가들의 협의체인 APEC이 WTO와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을 보완하는 주요 경제협력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요인이다.

APEC은 한국의 안정적 대외 무역·투자처 확보와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2008년 기준 세계 GDP의 54%,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APEC은 한국 총 교역의 67%, 전체 해외 투자의 72%, 그리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APEC은 인근 4대 강국과 ASEAN 등 주요 회원국들과 정기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한반도의 안보환경 개선을 비롯 정치·안보 분야에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 (3) APEC의 주요 성과

APEC은 출범 이래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첫째, WTO 출범을 비롯한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기여하였다. 1993년 각료회의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되면서 난항을 거듭하던 UR 타결에 정치적 힘을 실어주었다. 1993년 정상회의에서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부품 무관세화 관련 정상 메시지를 통해 그해 12월에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rade Agreement)’ 타결을 유도하였다. 2005년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비농산물 관세 감축공식(Swiss Formula)에 합의하는 등 WTO의 DDA 협상 개시와 진전에도 기여해 왔다.

둘째, APEC은 자발적 무역자유화 이행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역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왔다. 1994년 보고르(Bogor) 정상회의 계기에 무역·투자자유화 목표(선진 회원국 2010년, 개도국 회원국 2020년)를 설정하고, ‘개별실행계획 검토회의(IAP Peer Review: Individual Action Plan Peer Review)’라는 자발적·비구속적 이행장치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APEC은 역내 거래 비용 감축을 위한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Trades Facilitation Action Plan)’, 역내 투자 환경의 투명성과 개방성 제고를 위한 ‘투자원활화 행동계획(IFAP: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

셋째, APEC은 ‘지역 경제통합 비전을 담은 보고서(REI report)’를 채택하고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Region)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는 등 최근 경제통합을 향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넷째, APEC은 역내 기업인들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민·관 협력 증진을 실현해 왔다. 1995년 출범한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는 역내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매년 APEC 정상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업계 관심사를 전달하고 있다.

APEC은 이와 함께 경제·안보 관련 역내 협력을 강화해 왔다.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반테러협력을 APEC 핵심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교역안전회의 개최, 반부패 및 투명성 증진, 무역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AI에 대한 공동 대처, APEC 행동계획 채택(2005년) 등의 성과를 이룩했다.

#### (4) APEC에서의 한국외교 성과

한국은 APEC 창설 단계에서부터 호주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APEC 프로세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첫째, APEC의 제도적 프레임의 창설에 이바지하였다. 1989년 제1차 APEC 각료회의 개최 시 한국은 제3차 APEC 각료회의 주최를 제안하였다. 또한 동 각료회의에서 APEC 기본헌장에 해당하는 ‘서울 APEC 선언’이 채택되는 등 APEC의 제도적 틀 마련에 기여하였다. 한국은 1994년 설립된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f Trade and Investment) 초대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CTI가 APEC 핵심 회의체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중국, 대만, 홍콩의 APEC 가입에 촉진자 역할을 하였다. 한국은 1991년 APEC 각료회의 의장국으로 당시 APEC의 최대 과제였던 상기 3국의 가입 협상을 중재하여 APEC이 명실공히 아·태 지역 내 주요 경제를 모두 포용하는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무역자유화 관련 보고르 목표 설정시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여 여타 경제 관련 국제협상에서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무역·투자자유화 목표 연도 설정 당시 한국은 신흥공업국(NIEs: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자격으로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의 중간 년도인 2015년을 목표 연도로 수용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농업 등 분야에서 개도국임을 주장하여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은 이를 통해 WTO 농업협상, OECD 가입협상, 교토의정서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

넷째, APEC 채널을 통한 정기적인 정책협의 과정을 통해 주요 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한국의 10대 교역 상대국 가운데 7개국(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 호주, 싱가포르)이 APEC 회원국인 상황에서 APEC 프로세스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IAP Peer Review를 통해 APEC 회원국들의 무역·투자자유화를 촉진하고,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계기로 활용해 왔다.

다섯째, 한국은 2005년 APEC 의장국으로서 APEC 역내 무역·투자자유화를 위한 보고르 목표 중간 점검과 2010년(선진 회원국)과 2020년(개도국 회원국)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부산 로드맵’ 채택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은 2006년 정상 성과사업으로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를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한 가지 요소로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APEC 의제 개발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해오고 있다.

### (5) 향후 과제

2009년은 APEC이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해로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APEC은 향후에도 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기회는 물론 위기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APEC을 둘러싼 국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재정 안정성 확보, 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 등 APEC 개혁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PEC 개혁 논의는 FTAAP, 무역·투자자유화와 원할화, 구조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는 APEC 프로세스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논의 초기 단계부터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 한국은 또한 선도 그룹 참여, 양자·다자 간 의견 조율, 의제 기여도 증대를 통해 APEC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해 왔다.

우리 정부는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APEC 무역·투자자유화 작업과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APEC의 무역·투자자유화 작업과 경제통합 논의가 한국 기업들의 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APEC을 통한 아·태 지역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의 활동 강화

### (1) ASEM 추진 배경 및 경과

다자주의적인 세계 교역 질서가 확대되고 NAFTA, EU 등 지역주의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아시아, 북미, 유럽 중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미약했던 아시아·유럽 간 관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1994년 7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주관한 ‘아시아·EU 회의’에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구상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EU와 ASEAN 및 한국, 중국, 일본의 호응으로 1996년 3월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10개국(한·중·일 및 ASEAN 7개국)과 15개 EU 회원국 정상 및 EU 집행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ASEM이 개최되었다.

ASEM은 2년에 한 번씩 아시아와 유럽에서 번갈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외무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각종 후속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2) ASEM의 주요 활동

지역 간 협력체로서 ASEM의 특징은 양 지역 간 경제협력 확대 외에도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정치·안보 대화 증진, 사회·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등 양 지역 간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데 있다.

제1차 ASEM 정상회의(1996년 3월, 태국)에서 각국 정상은 ‘아시아·유럽 간 새로운 포괄적 동반자관계’라는 주제하에 정치·안보·경제협력 및 환경·마약·테러 등 제반 분야에서의 아시아·유럽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는 양 지역경제·사회의 발전 및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를 공동 목표로 추구할 것을 결의하는 의장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제2차 ASEM(1998년 4월, 영국)에서는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이와 관련된 논의가 주조를 이루었다. 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정상회의 의장서명서와는 별도로 아시아 경제위기에 관한 ‘특별성명서(The Financial and Economic Situation in Asia)’를 채택하였다.

제3차 ASEM 정상회의(2000년 10월, 한국)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향후 10년의 ASEM의 비전, 원칙 및 목적을 담은 ‘아시아·유럽 협력기본지침서(AECF 2000: 2000 Asia-Europe Cooperation Framework)’를 채택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을 채택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았다

제4차 ASEM 정상회의(2002년 9월, 덴마크)에서는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여 정치 분야 사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회의의 결과 문서로는 의장성명서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코펜하겐 정치선언(Political

Decla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과 ‘국제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Copenhagen Declaration on Cooperation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이 채택되었다.

제5차 ASEM 정상회의(2004년 10월, 베트남)에서는 EU 중동구 신회원국 10개 국과 ASEAN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이 ASEM에 신규 가입하여 ASEM 창설 이후 최초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제5차 정상회의 결과 아시아·유럽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아시아·유럽 간 경제동반자 선언’ 이 채택되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문화·문명 간 대화에 대한 ASEM 선언’ 을 채택하여 문명 간 대화 및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정상들의 공동 의지를 천명하였다.

ASEM 출범 10주년을 맞아 핀란드 헬싱키(Helsinki)에서 개최된 2006년 제6차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의 ASEM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회의는 ‘의장성명’, ‘기후변화에 관한 선언(ASEM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및 ‘ASEM의 장래에 관한 헬싱키 선언(Helsinki Declaration of the Future of ASEM)’ 등 3개 문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아시아의 몽골, 인도, 파키스탄, ASEAN 사무국과 유럽의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승인되었다.

제7차 ASEM 정상회의는 2008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정상들이 국제 금융위기 극복과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정세 의제와 함께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식량위기, 재난예방 및 대응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문명 간 대화의 심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7차 정상회의 결과 ‘의장성명’,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북경 선언’ 및 ‘세계 금융상황에 관한 정상성명’ 등 3개의 결과 문서가 채택되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들과 함께 제7차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세계 금융위기 극복 방안에 관한 정상성명 작성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ASEM에서 제안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선 ASEM 경제협력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2차 ASEM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TFAP와 IPAP 이행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간 무역 및 투자 증진을 꾀하고 있다. 무역자유화 및 다자주의 촉진을 위해 매 ASEM 정상회의마다 WTO 및 DDA 협상 타결 이슈가 중요 의제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유럽 지역의 민간 부문 간 협력 촉진과 정부·민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Asia-Europe Business Forum)’이 1996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 밖에도 환경, 인적 교류, 아동 복지,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유럽 환경기술센터(AEETC: Asia-Europe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er)’가 1998년 4월 제2차 ASEM에서 공식 출범하였고, 2002년 ASEM 환경장관회의의 출범과 함께 이에 흡수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또한 1997년 2월 출범하고 현재 ASEM 내 유일한 상설기구인 ‘아시아·유럽 재단(ASEF: Asia-Europe Foundation)’을 중심으로 양 지역 간 학술, 문화 및 인적 교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외에도 아시아·유럽 양 대륙의 젊은 지도자들이 모여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별 토론회와 여타 문화 행사에 참여하여 양 대륙 간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도모하는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AEYLS: Asia-Europe Young Leaders Symposium)’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 ‘ASEM 종교간 대화(ASEM Interfaith Dialogue)’도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2009년 9월 한국에서 ‘제5차 종교 간 대화’ 회의가 개최되어 ‘종교 간 대화를 통한 화합과 상생(Bridging Divides through Interfaith Dialogue)’이라는 주제로 이틀에 걸친 토론회를 거쳐 ‘서울성명’을 채택하였다.

### (3) ASEM을 활용한 한국외교 다변화 및 실용외교 실현

한국은 ASEM을 통하여 EU 및 ASEAN 등 국제관계에서 주요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4국 위주로 추진해 온 한국외교의 지평 확대와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체인 APEC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ASEM을 한국의 지역협력외교의 양대 축으로 삼아 이를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ASEM 내 협의를 통해 대테러,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유엔 개혁, 군비축소 및 통제 등 국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와 마약밀매, 테러, 돈 세탁, 조직 범죄, 전염병 관리 등 초국가적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ASEM 회원국들은 한국과 교역·투자 등 양자 간 경제관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ASEM 정상회의는 다자외교의 장인 동시에 경제 살리기와 성숙한 세계 국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실용외교 실천의 무대이기도 하다.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자이며, ASEM 회원국인 중국(19.9%), EU(12.7%), 일본(11.3%) 등과의 교역이 한국 전체 교역규모의 약 50%에 해당한다는 것은 한국과 ASEM 회원국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4) ASEM 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

한국은 ASEM 프로세스 발전의 모범적 기여국이다. 지난 2000년 제3차 서울 ASEM 정상회의와 2008년 제주 ASEM 재무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2004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ASEM 동북아 조정국(coordinator)으로서 ASEM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2009년 11월부터는 ASEM 동북아 조정국을 수임하여 2010년 브뤼셀(Brussels)에서 개최 예정인 제8차 ASEM 정상회의의 준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은 43개 회원국(EU 집행위 및 ASEAN 사무국) 중 경제 규모는 8위, 인구는 12위에 해당하는 중견국의 위치에 있다. ASEM 회원국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인구를 보면, 중국의 13억 3천만 명의

인구는 브루나이의 38만 인구보다 3,500배나 많다. 국민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룩셈부르크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화 8만 달러로, 미얀마의 1,900달러보다 42배나 많다. 한국은 이렇게 ASEM 내 존재하는 양극적 질서가 융합될 수 있게끔 하는 중견·중심국가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ASEM이 실질적 협력체로 발전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연구, 정보 격차 해소사업, 아셈듀오(ASEM DUO) 장학 사업, 철의 실크로드 사업, 사이버 보안 강화 사업, AI 대응 워크숍, 농촌 지역 개발 포럼 등 아시아·유럽 간 협력사업과 의제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 5.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GATT·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어 오던 한국의 대외 통상정책은 1990년대 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외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 정책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자주의와 병행하여 우리 정부는 1994년 UR 협정 체결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양자 또는 지역적 FTA 체결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98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대외 경제 조정회의를 열어 한국의 첫 FTA 대상 국가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개방 경제 국가인 칠레는 한국과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FTA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지리적으로 한국과 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해도 농산물 생산 시기가 달라 우리 농가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국내 정치적인 일정과 한국

농업계의 반발 등으로 협상은 장기화되었다. 결국 5년간의 힘겨운 협상 끝에 2003년 2월 한국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타결되었으며, 이로써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FTA 경쟁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다.

칠레와의 FTA로 중남미 진출의 고두보를 확보한 우리 정부는 이후 동남아시아의 거점국가인 싱가포르와 유럽의 거점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의 FTA도 추진하였다. 이들과의 FTA는 각각 2005년 8월과 11월에 체결되었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 정부는 ASEAN, 미국,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도 착실히 추진해 나갔다. 이와 함께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등 차세대 거대 경제권 및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페루, 호주 등 자원 부국이자 주요 수출 대상국과의 FTA 추진도 준비해 나갔다. 그 결과 한국은 2008년 12월 말까지 ASEAN, 미국 등 총 16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인도 및 EU와는 FTA 협상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GCC, 캐나다, 멕시코, 페루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터키, 콜롬비아, 러시아 등 다수 국가와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여건 조성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02년까지만 해도 WTO 회원국 가운데 몽골과 더불어 전세계에서 FTA를 한 건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였던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FTA 선도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FTA 정책은 2003년 8월 확정하고 2004년 5월 보완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동시다발적’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동시다발 전략은 당시의 불리한 대내외 여건과 전세계적인 FTA 체결경쟁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었다. 즉 한국은 세계적인 지역 블록화가 확산되고 BRICs 등 신흥 개도국들이 급속히 성장하여 한국 기업들의 수출여건이 악화되자 9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에는 4% 중반으로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으로 잠재 성장률마저 하락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획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FTA에 주목하게 된 내적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FTA 체결 경쟁 흐름 속에서 주요 수출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 약화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하게 된 FTA 추진 로드맵은 FTA 내용 측면에서도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고 WTO의 다자적 자유무역 체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WTO 규정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상품 분야에서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할 것을 제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성공적인 FTA 추진을 위한 정책 결정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 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였다. 동 절차 규정은 FTA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충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는 FTA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FTA 실무추진회의→FTA 추진위원회→대외경제장관회의로 이어지는 FTA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효과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FTA 추진위원회 산하에 대외 경제 전문가 및 업계 대표로 구성된 FTA 민간자문회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FTA 추진 단계마다 FTA 추진에 대한 정보를 가급적 상세히 공개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협상 개시 이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다.

FTA는 최혜국 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WTO 체제의 예외로서, FTA 상대국과 특혜적인 경제·통상관계를 설정하는 제반 법적·제도적 장치를 규정한다.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서 상호 간 특혜교역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무역 관련 규범에서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시장개방과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효과도 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FTA의



직접적 효과는 협정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칠레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FTA 성공사례로 꼽힌다. 발효된 지 5년이 지난 2008년에 한국의 수출은 발효 전인 2003년에 비해 6배 증가하였고, 칠레 국내 시장 점유율도 3%에서 6%로 상승하였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일본을 제치고 칠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교역과 투자 증대 등 경제적 효과 면에서 미국 및 EU와의 FTA 추진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FTA 정책 과제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선점을 도와 대미 수출 증대와 한국 경제의 효율성 제고 및 경제시스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등 11개 국책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대미 수출은 연평균 25.5억 달러 증가하고,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6.0%(약 80조 원)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대미 흑자 46억 달러, 대세계 흑자 2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미 FTA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는 2005년 상반기 두 차례의 FTA 사전 실무점검회의와 2005년 하반기 여섯 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FTA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2006년 2월 협상을 공식 개시하였다. 이후 총 열 차례 협상 회의를 거쳐 2007년 6월 30일 한·미 FTA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세계 제1위 경제권이며 우리의 제2위 교역 상대국이자 우리에게 대한 1위 투자국인 EU와의 FTA 또한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EU FTA는 2007년 5월 협상이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총 여덟 차례 협상을 개최하여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하여 잠정적인 합의가 도출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타결된 미국과의 FTA를 조기에 발효시키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도 가능한 조속히 마무리하여 우리 기업들이 하루 빨리 FTA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잠재적인 한국의 유망 수출시장을 계속 발굴하여 이들 국가와도 FTA를 체결할 계획이다. 일본 및 중국과의 FTA 추진 문제를 비롯하여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 6.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WTO 다자 간 무역협상, FTA 등을 통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safeguard) 등 무역구제 조치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 외국 정부의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조사 개시만으로 수출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우리 제품에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등이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규제 대응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관련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업계 자체적으로 외국의 규제당국과 직접 접촉·대응하여 우리측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외교통상부는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 때문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지역통상국 산하에 ‘수입규제대책반’을 설치하였다. 수입규제대책반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외국 규제당국과의 양자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 및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한국측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를 담은 정부 입장서를 관계국에 제출해 왔다. 또한 필요 시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여 업계 및 정부 입장을 전달하며, 양자 고위급회의 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하고 있다.

〈표 4〉 수입규제대책반의 주요 활동

- 수입규제 조사 각 단계에서 업계 입장 수렴
  - 수입규제 조사 개시 이전, 조사 중, 예비판정, 확정판정 등 각 단계를 망라하여 관련 업계 및 협회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 업계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측 대응 논리를 구성
- 수입규제국과 정부 간 양자협의를
  - 주요 수입규제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여 정부 간 양자 협의를 갖고 우리 업계 및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 요청
- 서한 및 정부 입장서 전달
  - 주요 수입규제 현안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서한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양자 고위급회의 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한국 입장을 피력

